

# 업계 ‘사후규제’ 불이익… 불량코인 상폐, 투자자 피해 키워

## 가상자산 제도화 현주소

### ① 제도적 공백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어 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법인의 시장 참여 등 후속 논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없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를 꺼리면서 거래대금도 급감했다. 가상자산시장의 현 주소를 짚어 본다. 〈편집자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에서 가상자산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지연’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초안을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세부 분류를 마련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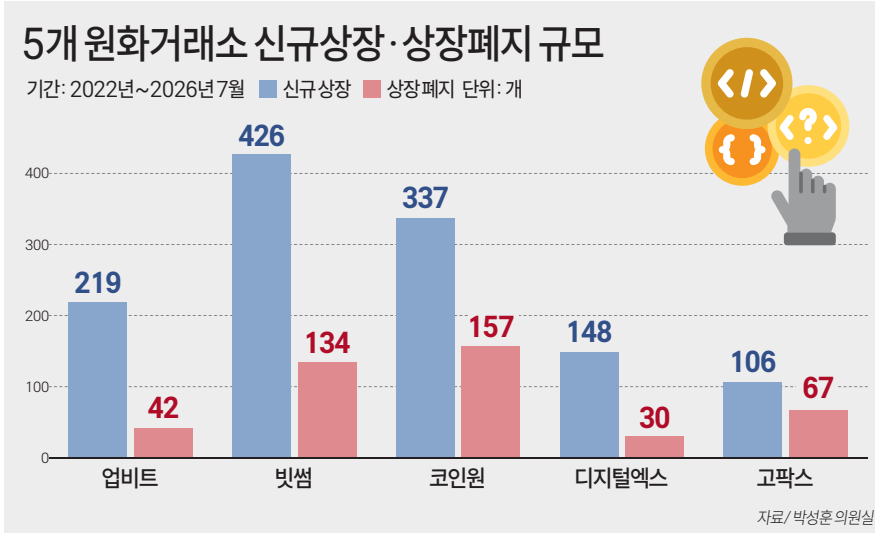
◆ ‘제도적 공백’ 지속…경쟁력 악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중요한 것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이어서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분류도 불명확해 규제 완화,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등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특금법 개정에 따른 거래소 신고제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등록제 시행 ▲트래블룰 시행 등 수 차례의 ‘사후규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사후 규제로 불이익을 받거나 사업 추진이 불발될 수 있는 만큼, 국내 거래소들은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보다 점유율 및 수수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했으며, 전문투자자 법인과 일반법인까지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논의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관련 논의는 1년 넘도록 중단됐다.

국내에서는 실명계좌제 도입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된 반면, 해외에서는 전체 거래 대금의 약 70~80%를 법인 및 기관 투자자가 차지한다. 법인 및 기관 투자자는 자금 규모가 막대하고 중장기 투자 비중도 큰 만큼, 시장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정적인 거래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선호하는 이유다.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통화가치와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송금 비용이 낮고 결제 편의성도 높아 기존 금융 체계를 점진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했지만, 제도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이용자 보호·공시체계 마련 기반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지연

국내 거래소, 신규사업 투자 보다  
점유율 및 수수료 경쟁에만 몰두  
스테이블 코인 경쟁력도 뒤흔쳐

업계 “가상자산 경쟁력 강화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처리 시급”

지연되면서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상장 경쟁’ 과열…명확한 기준 필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수수료 및 점유율 경쟁을 위해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을 경쟁적으로 상장하고, 상장에 앞선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불량 코인’을 단기간 내에 퇴출하는 ‘무더기 상장’을 지속하고 있어 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5개 원화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거래

소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신규 상장한 알트코인은 1236개(거래소 간 중복 포함)다. 같은 기간 거래가 중단된 코인은 430개 종목이다. 신규 상장 건수 대비 폐지 건수는 34.8%에 달한다. 100개의 코인이 신규 상장되면 같은 기간 동안 35개의 코인이 퇴출되고 있는 것.

거래소들이 신규 알트코인 상장에 적극적인 것은 점유율 및 매출 경쟁 때문이다. 신규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높고 투자관심도가 큰 만큼, 경쟁 거래소보다 빠른 상장을 통해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수료 수입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올해 신규 상장된 코인은 업비트가 72개로 가장 많았고, 빗썸이 62개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3개 거래소는 신규 상장 건수가 6~12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거래소들의 상장 경쟁으로 ‘불량 코인’이 대거 상장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들은 상장에 앞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정을 점검하는데, 빠른 상장을 위한 ‘졸속 심사’가 계속되면서 불량 코인의 가

격 급락이나 상장 폐지로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 우선순위 ‘뒷전’…기약없는 입법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좀처럼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10월 한 달 동안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기본법 초안을 마련해야 할 금융당국도 고객정보 유출 등 다른 현안이 시급한 만큼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주도하는 여당은 오는 11월 법안소위 심사 및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는데, 공청회 일정이 불발되면서 입법 목표도 불투명해졌다.

법안의 세부 내용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6월 기본법 초안 발표 이후 법인의 시장 참여,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주주 지분율 등 안건을 논의했으나,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떤 내용을 제외할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안의 핵심인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발행 및 유통 체계에 대한 규율도 제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본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법은 당초 지난해 말을 입법 목표로 제시했는데, 업계에서는 올해도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라면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제도적 기반 마련이 늦어지면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빠르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 달러값 주춤… 환율 1200원대로 떨어지나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000.0원 마감  
美 국채금리 상승세 한풀 꺾였지만  
엔화 기록적 약세 원화값 상승 제한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연일 강세를 지속했던 달러화가 주춤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엔화의 기록적 약세와 해외투자 수요 등 원화값 하락 요인도 여전해 서다. 전문가들은 원화가 여전히 저평가국면에 있는 만큼, 환율이 12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40.4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종가보다 3.2원 내렸으며, 지난 9월 10일 이후 한달여 만에 최저치(원화값 최고)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 기대감, 유로존 재정 우려 등으로 연일 강세를 지속했던 달러가 주춤하며 원화값을 끌어올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지표인 달러인덱스(DXY)를 산정하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 장 마감 당시 달러인덱스는 101.85로 집계됐다. 직전일인 5일 거래에서는 달러인덱스가 장중 102.54까지 올라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프랑스(법) 유로존 재정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달러값 상승을 부추겼던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유로존 재정우려가 완화하면서 미 국채 선호가 꺾였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완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349%까지 올라 지난 2002년 4월 이후 24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6일에는 장중 5.248%까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달러값이 주춤하면서 원화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원화와 동조성이 큰 엔화의 기록적 약세는 원화값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한국은 일본과 산업 및 수출구조가 비슷해 원화값이 지역 가축통화인 엔화를 따라 움직이는데,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엔화값이 약세를 지속하면서 원화값도 저평가되고 있어 서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의 달러·엔 환율 증가는 달러당 158.26엔을 기록했다. 달러·엔 환율이 달러당 164엔을 넘기며 40년 만에 최고(엔화값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 7월 말과 비교해선 다소 하락했으나, 미·일 양국의 외환당국이 적극 개입에 나섰던 지난 8월 초의 156엔과 비교해선 여전히 엔화가 약세인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엔화·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정책 기조가 여전히 뚜렷하며, 엔화값의 저평가 배경으로 꼽히는 미·일 중앙은행 간 기준금리차도 여전히 해 서다.

전문가들은 원화값이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본다. 원화가 여전히 저평가국면에 있는 만큼 상승여력이 여전하다는 분석에서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026년에 이어 2027년에도 GDP 대비 20%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라면서 “안정적인 수급 여건은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환율이 달러당 1200~145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환율로는 1280원을 제시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

## 저축은행, 고금리 유치전에도 수신 지지부진

전국 79곳, 1분기 정기예금 이자비용 약 6143억, 전년대비 26% 줄어 들어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막상 업권의 정기예금 이자 비용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무브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며 고객 유치에 나섰지만 수신 영업이 확대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지난 1분기 정기예금 이자 비용은 약 6143억원으로, 전년 동기(8321억원) 대비 26.2% 감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최근 들어 감소 폭이 커졌다. 정기예금 이자 비용은 지난해 1분기 8.3%, 2분기 6.7%, 3분기 0.2%, 4분기 9.2%씩 감소해 오다 올해 1분기 12.7%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정기예금 이자 비용은 저축은행이 예금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저축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며 고객 유치전을 벌이면 그만큼의 정기예금 이자 비용은 커진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던 지난 2023년에도, 저축은행은 5~6% 수준의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자금 확보에 나섰었다. 당시 정기예금 이자 비용은 1조 3093억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랐다. 예금금리 인상 기조와 예금 이자 비용 확대 부담

이 엿박자를 낸 것. 업권은 금리 인상에도 이자 비용이 줄어든 것을 두고 영업력 약화 영향을 꼽는다. 1분기 금리를 인상하며 고객 유치전을 벌여도 그만큼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할 만큼의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

실제 최근 저축은행 수신 잔액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해 11월 100조원대를 기록하다 지난 2월 97조6864억원으로 줄었다. 3월과 4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평잔 기준 100조원을 회복하고 있다.

예금 자산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대형 저축은행이 적극적으로 금리 경쟁에 참여하지 않은 점도 엿박자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수신을 확대할 유인이 없는 대형사들이 고객 유치전에 나서지 않아 평균적인 정기예금 이자 비용이 낮아졌다는 것.

다만, 저축은행권의 수신 경쟁은 일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 만기 평균 금리는 3.93%다. 지난 2월 올해 들어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서더니 최근 4%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4%대가 넘어가는 정기예금 상품도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HB저축은행의 비대면 회전정기예금 상품은 최고 4.51% 금리를 제공한다. /한재선 기자 wotjs4187@